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9년 10월 22일
도시·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의안번호: 2019 - 71
- 제 안 자: 이충숙 의원 외 9명
- 제안일자: 2019년 10월 4일
- 회부일자: 2019년 10월 22일
- 상정일자: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·교통위원회
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10. 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충숙 의원)

☐ 제안이유

「교통안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
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
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 시행령에 맞추어 위원 수 15명에서 20명으로 조정(안 제3조제1항)
- 나. 위원회와 관련 있는 해당 국·부서장으로 구성원 변경(안 제3조제2항)
- 다. 상위법에 따라 위원의 임기 변경(3년→2년) 및 연임규정¹⁾ 삭제(안 제5조)
- 라.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안전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(안 제5조의2)
- 마. 효율적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정에 맞게 위원회 개최 시기 변경(안 제6조)
- 바. 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’에 따른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, 용어 정비(제명, 안 제1조~제4조, 제7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「교통안전법」 제13조, 제17조, 제18조
 -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8조, 제13조, 제14조
 -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7조, 제110조
 -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」 제105조, 제113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의사항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(2019. 10. 15. ~ 2019. 10. 21.) 결과: 의견 없음

1) 법제처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에 관한 해석 의견(2017. 3. 22.)

법령에서 위원회 위원 등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령에서 민간 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연임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수석전문위원: 이광희)

가. 개정취지

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와 임기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심의·의결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임.

나. 개정내용

○ 안 제3조제1항: 위원회 구성원 수 조정

- 구성원: 15명 → 20명

※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

○ 안 제3조제2항: 당연직 위원을 교통안전 실무 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

- 부위원장: 부구청장 → 교통안전 실무 담당 국장

- 당연직 위원: 각 국장 → 교통안전 실무 해당 부서장

○ 안 제5조: 위촉직 위원의 임기 명확화 및 법령위배 사항 정비

- 위촉직 위원의 임기: 3년 → 2년으로 조정

-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연임규정 삭제

※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,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7조제3항

- 안 제5조의2: 안전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
 - 심의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안전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
- 안 제6조제1항 및 안 제6조제4항: 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
 - 정기회: 매년 1회 →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 시 개최
 - 서면심의 규정 신설
- 안 제1조~제4조, 제7조~제11조: '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'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 정비
- 안 부칙 제2조: 임기 2년이 지난 위원에 대한 경과규정

다. 종합의견

본 조례안은 「교통안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개최 시기 조정 및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관련 법령

□ 교통안전법

제13조(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)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"지방교통위원회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·군·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

②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) ① 시·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·군·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"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8조(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)**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(이하 "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는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교통안전법 시행령

- 제8조(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.
- ② 시·군·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.

- 제13조(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·장기 종합정책방향
2.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

-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시·도지사등"이라 한다)은 각각 계획연도 시작 전년도 10월 말까지 시·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기본계획(이하 "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확정하여야 한다.

- ③ 시·도지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·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등은 각각 다음 연도의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 또는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(이하 "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과 전년도 시·군·구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시·도지사는 이를 종합·정리하여 그 결과를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·도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

제107조(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)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.

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(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)
2. 위촉직 위원: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제110조(지방교통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.

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

제105조(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)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-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국가교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
제113조(지방교통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(이하 "지방교통위원회"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·도의 국장이 된다. <개정 2015. 7. 6.>

③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은 교통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